



Yale SCHOOL OF MANAGEMENT  
*Program on Financial Stability*

## EliScholar – A Digital Platform for Scholarly Publishing at Yale

---

YPFS Resource Library

---

7-21-2009


### Response to Report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n Overcoming Global Financial Crisis

South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ttps://elischolar.library.yale.edu/ypfs-documents/10289>

---

This resource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Yale Program on Financial Stability and [EliScholar](#), a digital platform for scholarly publishing provided by Yale University Librar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pfs@yale.edu](mailto:ypfs@yale.edu).

 금융위원회	<b>보 도 참 고 자 료</b>			• 금융산업의 선진화
	<b>배포시부터 보도 가능</b>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임자	최 훈 과장(2156-9810)	담당자	유영준 서기관(2156-9811)	
배포일	2009. 7. 21.(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총 4 매

**제 목 :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주요내용 >**

- 정부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08.12월초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검토
  - 그러나, 정부는 은행들의 자체자본확충을 요구하여 '08.12월말 BIS 비율을 제고하였으며, 이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은행까지도 펀드 신청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정부는 은행에게 자체 자본확충을 요구하기 보다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여 은행자본의 확충을 유도한 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순서였던 것으로 판단

**< 금융위원회 의견 >**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영향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실물 증개기능이 급격히 축소된 상황에서
  -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조성·운영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은행권의 자본여력을 확충하고
  -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불식하여 실물 증개기능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1)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이 검토되던 글로벌 위기 당시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은 10% 수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에 따른 은행 자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08.9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 10.79%

○ 당시 해외 언론 및 투자자들은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정부는 은행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선보강장치로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 방침을 검토하게 된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은행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자본이탈을 방지하면서 자본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당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선제적 자체 자본확충을 요구하되, 자체 자본확충이 미흡한 은행들 위주로 「은행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 은행권은 동 펀드의 지원 없이 자체 자본확충을 통해 '08.12월말 BIS비율을 12.31%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한은 등의 자금 사용 없이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해외 투자자의 우려 불식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음

\* 홍콩의 경우도, '08.10월 외환기금을 재원으로 은행들의 요청시 자금을 투입하는 '비상자본투입제도(Contingent Bank Capital Facility)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투입액은 전무한 상황

## (2) 금년 1~2월 이후,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 방향 수정

- 그러나, '09년 들어 은행권은 자본여력 화충에도 불구하고 중기 대출 등 실물지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실물 침체를 심화시켜 은행 부실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은행자본 확충펀드」의 운영 방향을 수정
  - 정부는 은행권의 실물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Credit-line 방식으로 「펀드」 사용 한도를 배정하고, 일부 은행에 대해 '09.3월 약 4조원의 「펀드」자금을 지원하였음
    - \* 정부는 「펀드」 참여 은행들과 MOU를 체결하고, 실물지원 실적을 점검
  - 은행권은 「펀드」 지원 4조원을 포함하여 '08.10~'09.3월중 총 23.7조원의 자본을 확충, '09.3월말 BIS비율이 12.94%(Tire 1 9.51%) 까지 제고됨에 따라 실물지원 여력이 확충되고,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이와 관련 펀드 조성 목표 20조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책 일관성의 부재라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으나,
  -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최소화하고,
  -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여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여력보유는 오히려 후선 정책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봄
- 정부로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침체의 지속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 및 자본확충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 (i)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운영
- (ii)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기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금융안정기금 조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아울러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소진상황 등을 보아가며 금융안정 기금의 구체적인 조성·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

<붙임> 국회 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7. 21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신 동 진 (788-4654)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분석보고서를 발간
-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높아진 기업의 부실리스크로 인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회생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킬 필요
- 정부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의 후선 보장 기능을 수행하고자 2008년 12월 초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계획을 검토
- 그러나 정부가 동시에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확충을 종용하자 은행들은 자력으로 2008년 12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킴
  - 그 결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립 경영이 가능한 은행이 일부 출현
- 하지만 만약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일부 특정은행만을 지원한다면 지원 받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부실은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가. 그렇기 때문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은행까지도 펀드신청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나.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정책 의도였다면, 은행의 자본확충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문제점을 야기

□ 정부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이유로 기업구조조정을 꺼리는 은행에게 자력으로 자본확충을 요구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미리 조성된 동 펀드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은행자본의 확충을 유도한 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순서였던 것으로 판단

□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가 향후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일관성과 정책의 집행순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

□ 아울러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그리고 「금융안정기금」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세 가지 펀드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는 경쟁적 구조의 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



대한민국국회